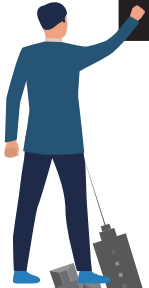


GLOBAL NEWS PICK

글로벌 뉴스픽





차별금지법

1 한국

성차별금지법안 발의 후 논란 일자 철회

2019년 2월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받고 발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되었다.

성차별금지법안은 얼핏 그 이름만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쉽게 알 수 없으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성별’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 법안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직권 조사와 결정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성별’에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다.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권고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정의하여 성별에 제3의 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과 차별판단지침에도 성별에는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시에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성차별금지법안은 인권위의 시정 권고 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시정명령 불이행시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권고적 효력 밖에 없는 인권위의 결정에 이와 같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우회적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 법안이 지난 2월 28일에 철회된 직후 3월에, 동일한 명칭과 내용에 처벌을 더 강화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이 또다시 발의하였다. 그러자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등록되었고, 이로 인해 4월 12일에 철회를 하였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입법으로 발생할 기본권 침해와 역차별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만적이고 기습적인 입법 시도가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평등 정책

1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男女 말고 '제 3의 성'도 인정

크리스천투데이는 2019년 4월 1일자 기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온라인 홈페이지 진정서 양식의 '성별'란에 '지정되지 않음(직접 기입)'을 넣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보도하였다. 기존에는 진정인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의 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트랜스해방전선 등 LGBT 인권단체들이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를 검토한 후 진정 내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결과라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른 언론사에 "기존에는 4가지만 성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중에 모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며 "본인이 직접 성별을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월에는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이러한 인권위의 입장에 대해 위헌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19년 2월 27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영국 출신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씨가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2017년 제기한 진정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각하' 결정은 진정 내용이 거짓이거나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내리는 '기각'과는 다른 것으로, 인권위가 자체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성 결혼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정책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거세어지고 있다.



생명윤리

1 한국

헌법재판소,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에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재판관 중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단

순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내려, 7년 전 합헌 판정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관련 낙태죄 조항은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하고, 시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폐지가 된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후 22주가 안 된 태아는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에 근접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기간에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낙태 허용 사유에 직장 소득 등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들은 임신 14주 내에는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결정 직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발 빠르게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과 낙태 허용사유를 개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형법 개정안에서는 임신부의 자기 낙태죄와 의사 등의 동의 낙태죄 조항을 완전 폐지하였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현재의 단순위헌 의견에 따라 임신 14주 내 낙태의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허용과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 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SNS를 통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은 현재 결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현재는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개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아울러,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없애고 모자보건법의 벌칙조항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은 법령 주무 내지 담당 부서를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변경을 꾀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모종의 의도가 숨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도 낙태 허용사유와 요건이 미비한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임신 14주내에는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에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수태 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현재 결정에 대해서도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 장성하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예단하여 그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박탈할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번 낙태죄 판결로, 불우하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역경을 극복하여 인류 문명의 발전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위인들의 사례가 조명을 받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운동이 촉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2 미국

미국 조지아주,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 법 제정

CBS NEWS는 미국 조지아주의 캠프 주지사가 지난 5월 7일에 배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심장박동법안(Fetal Heartbeat Bill)에 서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배아의 심장은 통상적으로 임신 5주에서 6주 사이에 뛰기 시작한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이 법의 제정이 낙태를 금지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캠프 주지사는 법안을 서명하는 날 아침에 “조지아주는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무고한 태아를 보호할 것이고, 우리는 약한 자를 지킬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변호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일어나 변호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법은 임신 24주에서 25주 후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여성의 낙태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재생산권 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는 이 법이 2020년 1월에 발효되기 전에 막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법안 서명식에서 캠프 주지사는 이 법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조지아주는 생명을 위한 싸움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과 같이 낙태를 제한

하는 유사한 법이 올해에만 미국 15개 주에서 발의가 되었고, 켄터키주와 미시시피주, 오하이오주의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서명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법이 성공적으로 발효가 된 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렛 캐노버 신임 대법관의 취임으로 연방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늘어난데 고무되어, 낙태금지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

1 중국

중국에서 탈북자 7명 체포 ... 강제 복송 위기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지난 4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해 중국 선양 외곽 지역에서 은신 중이던 최양(9)과 최양의 삼촌 강모(32) 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복송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들은 이달 초에 압록강을 넘어 탈북해 선양 외곽의 은신처에서 이동을 대기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 다른 5명의 탈북민도 함께 체포됐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탈북자들은 랴오닝성 안산시 공안국과 선양시 공안국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북한영사관 직원 면담을 거쳐 북한 국적이 확인되면 북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양 부모는 4월 28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29일 주한 미국대사관, 30일 주한 중국대사관을 잇달아 방문해 “딸의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중국 내 탈북민과 중개인 색출을 위해 중국과 북한 정부가 공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5월 3일에 VOA Korea는 복수의 소식통이 ‘VOA’에 북한 보위부의 사주를 받은 북한인 혹은 보위부 요원이 탈북민으로 가장해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 그룹에 들어간 뒤 탈북 중개망 정보를 파악해 모두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중국 선양(선양)에서 지난 주말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7명도 비슷한 사례로 알고 있다는 제보를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회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올려놓는 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커지면 인권 상황이 더 호전되고 언젠가는 이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인권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최 양의 부모는 중국 선양의 한국영사관 담당자와 연락했지만 “어느 공안에 잡혔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고, 외교부 담당자는 최 양 부모에게 “중국 쪽에서 선처를

베풀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미국 워싱턴DC에서 5월 2일에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듯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며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가장 열심히 보살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1 미국

영화 언플랜드, R등급 부여와 광고 거부 논란 속 흥행

프로 라이프(Pro-Life, 낙태반대) 영화 언플랜드(Unplanned)가 3월 29일 미국 전역의 1,100여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했다. 언플랜드는 미국 최대 낙태 옹호 단체인 플랜드 패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서 낙태 클리닉 디렉터로 활동했던 애비 존슨이 프로 라이프 활동가로 전향하게 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미국 영화협회(MPAA)는 언플랜드 영화에 대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 R 등급을 부여 하였는데, 이를 두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MPA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언플랜드를 13세 관람가에 해당하는 PG-13 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또한, 할리우드리포터에 따르면 라이프타임(Lifetime), 홀마크 채널(Hallmark Channel), HGTV 등 다수의 케이블 채널이 영화 언플랜드의 “민감한 특성” 때문에 광고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의 프로듀서인 존 설리반은 “광고비를 집행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트위터 측은 실수라고 밝혔지만, 개봉 다음 날 영화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되기도 했다. 1시간 만에 해당 트위터 계정이 복구되기는 했지만, 해당 계정에서 팔로우 버튼을 클릭했던 네티즌들의 트위터 계정이 다시 설정되면서 언플랜드 계정을 팔로우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다.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같은 기간 개봉한 덤보, 어스, 캡틴 마블, 파이브피트아파트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플랜드는 300만 달러 미만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혹평을 받았지만, 스크린당 평균수익에서 5770달러 대 650달러로 페미니즘 영화인 캡틴 마블을 크게 앞섰다. 제작 예산은 그 반대로, 언플랜드가 600만 달러 규모로 저예산 영화인 반면 캡틴 마블은 1억5200만 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화다.

4월말 기준 영화 언플랜드는 미국 내에서

2,000만 달러의 흥행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영화에 대한 광고 신청은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고, 넷플릭스(Netflix)도 광고 요청을 단칼에 묵살했다.

영화가 성공가도를 달리자 영화의 실제 주인공 애비 존슨은 데일리라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낙태 찬성론자(Pro-Choice)가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찬성론자들의 상담 메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의회, 칩 필레 매장에 무지개 깃발 게양 결정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공항에 새로 입주하는 칩 필레(Chick-fil-A) 매장에 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게양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지난해에 산호세 시의회는 칩 필레 식당의 산호세 국제 공항내 입주를 승인하였는데, LGBTQ 인권 활동가들과 일부 시민들은 칩 필레를 반동성에 기업으로 낙인찍어 입주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들은 칩 필레를 즉시 공항 매장에서 쫓아내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업 가치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산호세를 방문하는 LGBTQ를 환영할 수 있는 기업으로 대체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시의회는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지지를 보여 주기 위해 만장일치로 공항에 입주한 매장에 무지개 깃발과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청색, 분홍색, 흰색 깃발을 걸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을 제안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게이임을 선언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켄 이야거로 알려졌다.

6월에 개장을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칩 필레 식당에는 어디에 이러한 깃발을 걸게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담당 시 공무원이 결정을 할 예정이다.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칩 필레는 설립자인 트루엣 캐시씨가 사업 경영에 성경적 원칙을 사용해 왔고, 현재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 CEO인 댄 캐시씨는 칩 필레가 성경적 정의에 따른 가족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칩 필레 기업은 설립 이후로, 프로 패밀리(Pro-Family) 단체와 기독교 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2017년에는 약 180만 달러 이상의 기부를 하였다.

산호세시의 소속 변호사는 시의회가 정치적 입장을 문제 삼아 반동성애/트랜스젠더 기업이 시가 소유한 공항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What is true freedom?

